



트럼프 암살 시도 4, 5면

삼성전지노조
파업
2~3면

프랑스
총선 결과
3, 11면

민중전선: 파시즘에 맞서려면
반드시 필요한 연합인가?
8~10면

나토
정상회의
6, 7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12면

윤석열의 위기와
반윤석열 투쟁
16, 15면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무기한 파업을 지지하라

관련 기사 2~3면

삼성전자노조의 무기한 파업을 지지하라

신정환

사용자 측의 버티기와 주류 언론의 비난 공세에도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은 일주일 넘게 파업을 굳건히 이어가고 있다. 사용자 측이 1차(7월 8~10일) 파업에도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자 삼성전자노조는 10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보수 언론들은 삼성전자노조의 파업을 “귀족 노조”의 “매국 행위”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진보’(사실상 자유주의) 언론은 삼성전자 노동자들에게 동정적이지만, 파업을 확실하게 지지하는 것은 주저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지금의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를 일궈 낸 것은 밤낮으로 “몸을 갈아 넣으며” 일한 노동자들의 피땀이다.



7월 8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정문 앞 파업 결의대회

‘귀족 노조’의 이기적 파업?

‘초일류 기업 삼성’이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는 엄청난 노동강도와 위험한 작업 환경이 가려져 있다. 반도체 노동자들은 “백혈병을 비롯한 직업성 암, 생식독성 피해(유산, 불임, 자녀의 건강 손상), 난치성 질환에 시달려[려 왔다.]” (삼성전자노조 보도자료)

삼성전자에서 1983년 최초로 반도체 생산을 시작한 기흥사업장의 여성 노동자들은 식사 시간이 부족해 “밥을 마신다.” 24시간 돌아가는 반도체 공정의 특성상 사용자 측은 노동자들이 생산 라인을 절대 비우지 못하게 한다. 인력도, 휴게 시간도 턱없이 부족하다.

여성 노동자들은 생리 휴가와 연차 휴가도 마음 편히 사용하지 못한다. 노조에 따르면, 일부 관리자들은 여성 노동자들의 생리 주기까지 물어 보면서 ‘생리 휴가를 쓰려면 진단서를 가져 오라’고 압박한다.

기흥사업장은 2007년 23세의 젊은 나이에 산업재해로 백혈병을 얻어 사망한 고황유미씨가 일했던 곳이기도 하다.

열악한 노동 환경은 비단 기흥사업장 여성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천안사업장에서 일하는 11년차 엔지니어 박준우 조합원은 이렇게 말했다.

“작업할 게 너무 많은데도 인력이 부족해서 설비 엔지니어들은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회사는 항상

안전이 경영상의 제1 원칙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말뿐이에요. 모든 작업에서 2인 1조가 원칙인데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봉 30퍼센트 삭감

고임금 노동자의 이기적인 파업이라는 것도 가당치 않다. 지난해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들은 적자를 이유로 성과급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 물가 급등 상황에서 전체 연봉의 3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성과급을 전액 삭감한 것은 삼성전자 노동자들에게 커다란 생계비 고통을 가했다.

세계적인 자본가 신문 <파이낸셜 타임스>조차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받는 대우가 경쟁사에 비해 좋지 않기 때문

에 그런 불만이 전례 없는 파업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와중에 삼성전자 임원들은 지난해 수억 원씩 인센티브를 받았다. 이재용은 지난해 배당금 총액이 6.4퍼센트 늘어난 3244억 원을 받았다.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은 수십 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용자 측은 올해도 아주 적은 성과급만 지급하려고 한다.

노동자들은 이번 파업을 통해 임금 인상과 더불어 유해 물질 누출과 화재 위험, 인력 부족, 휴가 사용 억제 등 열악한 환경도 바꿔내기를 바란다. 7월 8일 파업 집회에서 노동자들은 “우리는 사용자 측의 소모품이 아니다” 하고 절규했다.

고무적이게도 여성 노동자들이 파업

에 많이 참가하고 있다. 삼성전자노조는 이렇게 밝혔다. “기흥사업장 6, 7, 8라인의 여성 노동자들이 이번 파업에 대거 참여하면서 해당 라인 가동률이 기존 80퍼센트에서 18퍼센트로 하락했다.”

노조에 따르면, 일주일 간의 파업으로 일부 생산라인의 공정이 지연되고 품질 사고가 일어났다. 사용자 측은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생산량을 줄여 대응하고 있다. 물론 관리자들을 통해 파업 방해와 회유도 일삼고 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파업 동력이 줄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사기를 꺾으려 하지만, 조합원들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다.

“[여러 지역의 사업장을 순회하며 열리고 있는 파업 집회에] 거리가 먼 조합원들은 못 오지만, 파업 참가자는 유지되거나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파업 돌입 후 일주일간 노조에 3700명가량이 새로 가입했어요. 지지는 커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겁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고무되는 것 같아요.”(박준우 조합원)

사용자 측은 파업이 장기화되면 생산 차질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금의 파업 대오를 유지하고 더 많은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가한다면, 사용자들의 우려를 현실로 만들 수 있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반도체 제조 여성 노동자들의 사진. 노동자들은 관절염, 손목터널증후군, 습진 심지어 정신 질환까지 시달리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노동자 건강에 해를 끼친다

세계가 삼성전자 파업을 주목하고 있다

이번 파업은 전 세계 반도체 기업 중에서 처음 벌어지는 파업이기도 하다.

세계 반도체 산업은 지난해 불황을 겪다가 올해 회복세로 돌아섰다. 특히, AI 열풍을 타고 반도체 수요가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반도체 기업들과 거대 테크 기업들은 삼성전자노조의 파업이 반도체 공급에 악영향을 줄까 봐 우려한다.

물론 다른 반도체 노동자들을 고무할까 봐 특히 걱정한다. “삼성전자노조의 무기한 파업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

회복 중인 기술 및 칩 산업의 노동자들이 비슷한 행동에 나서도록 자극할 수 있다.”(《블룸버그》)

삼성전자노조의 파업은 고물가·고금리 등 생계비 고통에 맞서 국제적으로 벌어져 온 임금 인상 투쟁의 일부다. 한국 노동자들도 실질임금이 2년 연속 하락해 생활고가 크다.

주류 언론의 비난이나 기회주의적인 침묵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다수는 이 파업이 자신들의 처우 개선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반도체 기업 지원하자면서 노동자 파업은 외면하는 민주당

민주당은 삼성전자 파업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 지원책은 신속히 내놓고 있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반도체 특별법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반도체 기업들에게 막대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게 골자다.

당 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전

대표도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연기 추진을 시사했다.

이 전 대표는 또한 그간 적극 주장해 온 횡재세(초과 이익을 거둔 기업들에 대한 과세)는 추진하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 등 기업주들의 눈치를 보며 민주당은 일관되게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금속노조)은 실질적인 연대에 나서라

민주노총과 좌파 정당들은 진보당을 제외하고는 삼성전자노조의 무기한 파업에 공개적인 지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민주노총 금속노조는 무기한 파업 전환 전인 7월 8일 파업 집회에 금속노조 부위원장을 참가시켰다.)

‘반도체를 불모로 한 고임금 노동자들의 투쟁’이라는 비난에 정면으로, 공세적으로 맞서는 것이 두려워서일까.

정의당과 노동당은 삼성전자 파업 기간에 벌어진 금속노조의 부분 파업(노란봉투법 제정 등이 주요 요구) 지지 성명은 발표했다.(대표적으로 진보당은 금속노조 파업, 삼성전자 파업을 모두 지지했다.)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투쟁보다는 노동계급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개혁 입법이 더 중요하다고 봐서일까.

물론 개혁 입법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경제 투쟁일지라도) 아래로부

터의 투쟁이 입법의 보조적 수단으로 자리매김돼 제한적으로 벌이는 수준로는 개혁의 진정한 동력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기층 노동자들이 능동적으로 참가하는 파업이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에 이기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식과 조직뿐 아니라 계급 전체에 끼치는 영향면에서 더 크고 중요하다.

삼성전자노조의 파업은 정치적·이데올로기적으로 단순히 한 부문의 투쟁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반도체로 먹고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반도체는 기간산업이자 최대 수출 품목이다. 삼성전자 노동자 투쟁에 해외 주요 언론들이 지대한 관심을 표하고, 보수 언론은 계거품을 물고 삼성전자 파업을 맹비난하는 이유다.

노동조합들은 삼성전자 파업에 전폭적인 지지와 연대를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편집팀 논설)

프랑스 총선 결과는 정치 위기의 지속과 파시즘의 전재를 보여 준다

인종차별 반대, 국민연합 반대 공동 행동이 지속돼야 한다

이번 총선 결과로 드러난 점들을 한번 짚어 보기로 한다. 첫째, 국민연합이 이미 1차 투표에서 37석을 얻었는데, 이는 37개 지역에서 그자들이 절반이 넘는 지지를 얻었다는 뜻이다. 파시스트들이 프랑스에서 이미 상당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1차 투표에서 국민연합에 투표한 유권자들은 2차 투표에서도 그랬다. 이는 프랑스 파시스트들이 이미 구축한 상당한 기반이 꽤 단단하고 안정적이라는 뜻이다.

이번 총선 결과로, 국민연합은 금기시되는 정당이 아니라 정상적인 정당처럼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자리잡게 됐다.

둘째, 마크롱의 당이 비록 의회 다수파 지위를 잃었지만, 득표는 늘었다. 1차 투표에서 거의 몰락한 듯했던 그들 중도파가 2차 투표에서는 입지가 강화됐다. 좌파 연합인 신민중전선이 국민연합을 저지하겠다며 좌파도 아닌 마크롱 당 후보들에 적잖은 후보직을 양보한 덕분이다.

특히, 마크롱 정부의 악질적인 인종차별주의 내무장관 제랄드 다르마њ과 연금 개악안을 기초한 총리 출신 엘리자베트 보른에게 양보한 것은 신민중전선의 약점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번 총선 결과가 보여 준 세 번째 점은, 누가 총리직을 맡든 새 정부도 강경한 행정 조치들과 경찰력에

많이 의존해야 하는 매우 불안정한 정부일 것이라는 것이다. 총선 결과 어느 정당도 과반(289석)을 차지하지는 못하면서 향후 총리가 어떤 세력에서 배출될지가 현재 사람들의 관심사이다.

관례대로라면 1당을 차지한 신민중전선에서 총리가 나와야 하고, 그중에 ‘복종하지 않는 프랑스’의 지도자 장뤼크 멜랑송이 유력한 총리 후보로 거론된다. 그러나 마크롱과 다르마њ이 선거 기간 급진좌파가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거듭 견제구를 날렸다. 그래서 기껏해야 중도좌파 인사가 총리직을 맡을 걸로 예상된다. 계급투쟁에서 결국 자본가 편을 드는 정부일 것임은 분명하다.

이런 새 정부는 정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자본주의 시스템이 복합 다중 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지배계급은 경제뿐 아니라 다른 거의 모든 측면에서도 번번이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새 정부는 생계난에서 벗어나고자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직면할 수 있다. 프랑스 좌파는 이를 지지해야 한다.

동시에, 파시스트들은 바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키기 위해 이민·난민·무슬림 등을 계속 공격할 것이므로 프랑스 좌파는 인종차별 반대, 파시즘 반대 운동을 계속 벌여야 할 것이다.



역대 프랑스 정부들의 신자유주의와 인종차별은 국민연합의 성장에 도움을 줬다

미국의 심각한 위기를 보여 준 트럼프 암살 기도

토마시 텅글라-에번스

도널드 트럼프는 7월 13일(현지 시각) 암살 기도에서 살아남았지만, 이 사건은 심각하게 쇠락하고 있는 미국 정치 체제를 또 한 번 강타했다.

비밀경호국 요원들은 트럼프에게 총을 쏜 토머스 크룩스를 사살했다. 이날 펜실베이니아에서 열린 트럼프 선거 유세의 참가자 한 명이 죽고 두 명이 다쳤다.

이 사건은 트럼프와, 미국과 전 세계의 극우·인종차별적 세력들을 흥분시킬 것이다.

트럼프는 이번 주 후반에 공화당 공식 대선 후보로 지명될 것이다.

“국민적 단결” 운운하는 주류 정치인들의 도움으로, 트럼프 지지자들은 벌써부터 이번 암살 기도를 이용해 트럼프의 극우·인종차별적 정치에 대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공화당 소속 하원의장인 마이크 존슨은 트럼프 지지자와 반대자 모두 “격한 표현을 누그러뜨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존슨은 트럼프 반대자들의 트럼프 “악마화”와 “매도”가 이번 암살 기도로 이어졌다고 비난했다.

트럼프의 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도 민주당과 “그들의 언론계 친구들이 용의주도하게” 트럼프를 “사실상 히틀러”로 몰아붙여 왔다고 비난하는 글을 ‘엑스’(옛 트위터)에 게시했다.

영국의 극우 정치인 나이절 퍼라지는 다음 주 미국 밀워키에서 열릴 공화당 전당대회에 트럼프를 지지하러 참여하겠다고 했다. 극우 정당 영국개혁당의 대표인 퍼라지는 이렇게 만족스러워 했다. “트럼프는 당선이 가장 유력한 후보다. 그리고 오늘의 극악무도한 사건을 계기로 트럼프는 승리할 것이다.”

국내외의 불안정

이번 암살 기도는 상시적인 것처럼 보이는 더 광범한 불안정의 한 징후다.

그 불안정의 근원은 미국 사회가 경제·정치·생태·제국주의적 위기로 인해 안으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는 데에 있다.

미국 국가는 자신의 헤게모니, 즉 세계 자본주의의 지도적 국가라는 지위를 유지하는 데에 갈수록 더 어려움을

트럼프 암살 미수로 지금 극우가 득을 보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임은 필연적이지 않다

겪고 있다.

국외에서 미국 국가는 3중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중국 제국주의의 부상과 중동에서의 확전 위험, 우크라이나에서 실패하고 있는 대(對)러시아 대리전이 그것이다.

국내에서 미국 국가는 사회의 퇴락과 장기 불황, 정치 양극화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이 국내의 위기들은 국외의 위기로 인해 더 악화되고 있다.

현 바이든 정부의 중도 정치는 그 불안정을 낳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다.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켰을 뿐이다.

국제 무대에서 이런 미국의 어려움은 이번 주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열린 전쟁광들의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타난 불안감으로 표현됐다. 이는 미국 제국주의가 직면한 도전들과 트럼프 재선 가능성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국내에서는 대기업을 지원하며 평범한 사람들에게 일부 미미한 혜택만 주는 바이든의 정책은 사회적 위기를 완화하지 못함은 물론 미국 자본주의의 건전성조차 회복시키지 못했다. 올해 초 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2퍼센트가 트럼프를 최선의 미국 경제 관리자라고 꼽았다. 바이든을 꼽은 응답자는 31퍼센트에 불과했다.

그리고 트럼프와의 대선 토론에서 바이든이 보인 형편없는 모습과 그 후에도 이어진 잇따른 말실수가 바이든에 대한 불안감을 키워 바이든 자신의 대선 운동이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더해 미국은 심각한 불평등이 두드러지고 있다. 미국 조세정책센터에 따르면, 2022년에 상위 1퍼센트의 평균 연 소득은 80만 달러가 넘었다. 상위 20퍼센트의 평균 연 소득은 약 28만 달러였다. 반면 하위 20퍼센트는 평균 연소득 약 1만 5000달러로 연명했다.

트럼프 부상의 배경

트럼프는 “아메리칸 드림”의 종말에 힘입어 부상했다. 트럼프는 노동계급의 임금을 삭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없애고 불평등을 심화시킨 30년에 걸친 신자유주의에 대한 누적된 분노와 불만을 이용해 득을 봤다. 트럼프는 대중의 분노를 자신에 대한 지지로 결집시키려고 인종차별을 부추기고, 이민자를 희생양 삼고, 대중의 분노가 향하는 방향을 진짜 엘리트(억만장자·기업주·금융가들, 트럼프도 그 일원이다)가 아닌 “리버럴 엘리트”로 뒤돌렸다.

바이든과 트럼프는 미국 지배계급의

서로 다른 부문을 대표한다. 그 부문들은 위기에 처한 미국을 안정시킬 방안을 두고 견해가 엇갈려 있다.

서로 맞물려 있는 이 위기들은 — 한때 자유 민주주의의 모범이라 떠받들 어지던 — 미국 정치 기구들 안에서도 표현됐다. 지난 4년 사이 미국에서는 극우가 국회의사당을 습격하고, 트럼프가 2020년 대선 패배를 부인하고, 많은 공화당 지지자들이 계속 대선을 “도둑맞았다”고 믿는 일이 벌어졌다.

트럼프의 대선 패배에도 공화당에 대한 그의 장악력은 약화되지 않았다. 이는 기층에서 우익적 급진화를 심화시켰고, 상·하원 모두에서 극우를 성장시켰다.

지난해 1월, 10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하원에서 의장을 선출하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는가? 당시 공화당이 내놓은 후보인 케빈 매카시는 트럼프를 지지했던 자였지만 일단의 공화당 의원들은 그가 충분히 우익적이지 않다고 여겼다.

투표를 몇 차례나 거듭하고 나서야 하원의장이 된 매카시는 결국 지난해 10월 해임됐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하원의장을 해임한 것이다.

매카시는 공화-민주 양당 사이의 막후 협상과 교섭으로 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비교적 전통적인 방식을 추구했다.

반면 극우 성향의 트럼프 지지자들은 올해 초 입법 과정을 사실상 마비시킬 수 있었다.

이 위기에서 우익이 득을 보는 것은 필연이 아니다. 거대한 사회 운동들이 미국 사회를 뒤흔든 바 있다. 예컨대 캠퍼스의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 지난 트럼프 정부 때 일어난 대중적 항의 운동 등이 그 사례다.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한 버니 샌더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 모임 ‘스쿼드’에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런 기대를 민주당의 기성 정치로 흡수시켰고, 이번 대선에서는 바이든을 후보로 밀고 있다.

희망은 거리와 캠퍼스와 일터에, 그리고 민주당에 의존하지 않는 혁명적 사회주의 정치에 있다.

출처 Tomáš Tengely-Evans, ‘Trump assassination attempt shows deep crisis in US’ (2024. 7. 14) / 번역 김준호

미국 좌파의 실패는 어떻게 트럼프와 우익의 부활에 일조했나

토마시 텅글라-에번스

많은 미국인들이 트럼프에 반대하는데도 어떻게 트럼프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유력할 수 있는가?

최근 몇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 국가를 뒤흔든 대중운동에 참여했고, 그런 만큼 좌파가 일대 전성기를 누리고 있어야 마땅하다.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과 그에 대한 바이든과 민주당의 지원이 미국 역사상 가장 크고 광범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촉발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캠퍼스 점거 운동에 참가했고, 이 운동은 미국 전역으로 번지고 글로벌 학생 운동을 촉발했다.

또 많은 활동가들이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에서 “지지 후보 없음” 투표를 호소해 “제노사이드 조(인종 학살자 바이든)”를 규탄했다.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과 여성의 임신중지권 방어 운동, 트럼프 정부하에서 벌어진 항의 운동이 남긴 퇴적물 위에서 벌어졌다.

그리고 거리·캠퍼스 운동과 함께, 노동계급 운동도 부활하기 시작했다. 2023년에 미국의 노동조합들은 지난 23년 이래 가장 많이 파업했다. 비록 기존의 매우 적었던 파업 건수에서 늘어난 것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한 버니 샌더스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좌파 하원의원 모임 ‘스쿼드’ 등은 미국 노동계급 사이에서 훨씬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민주당에 대한 의문

그렇다면 위기 속에서 왜 트럼프와 우익이 성장하고 있는 것일까? 답은 모든 잠재력과 급진적 정서를 민주당으로 흡수시켜 온 미국 좌파 정치의 한계에 있다.

샌더스와 ‘스쿼드’ 같은 대표적 좌파 인사들은 투쟁을 민주당의 기성 정치로 끌고 들어갔다.

샌더스는 7월 13일 자 <뉴욕 타임스>에 실린 글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썼다. 샌더스는 바이든이 “미국 현대사상 가장 잘 직무를 수행한 대통령이고, 데마고그이자 병적인 거짓말쟁이인 트럼프 씨를 꺾을 가장 강력한 후보”라고 주장했다.

오카시오-코르테스도 이렇게 보냈다. “바이든이 우리의 후보다. 바이든은 사퇴하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은 대선 경쟁 중이고 나는 그를 지지한다.”

미네소타주의 연방 하원의원이자 ‘스쿼드’의 일원인 일한 오마는 지난 2월 바이든이 “팔레스타인인 학살을 용인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나 지금은 바이든을 그녀 생애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찬양한다.

오마는 “바이든을 11월에 결승선까지 밀어주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자”고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촉구했다.

무엇이 이러한 정치적 급선회를 가능하게 하나? 오마는 다가오는 8월에 민주당 하원의원 후보 예비경선을 앞두고 있다.

바이든을 지지함으로써 오마는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비판을 잠재우려 한다. ‘스쿼드’가 바이든의 정책을 지지하지 않아 공화당을 이롭게 한다는 비판을 피하려는 것이다.

미국 정치 고유의 역학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극우를 물리칠 방법을 둘러싼 더 광범한 논쟁의 일부다.

샌더스는 “지금은 프랑스의 진보·중도 세력에게서 교훈을 얻어야 할 때”라고 말한다. 샌더스는 좌파와 중도파가 “정치적으로 큰 차이가 있지만 ... 우익 극단주의를 확실히 물리치기 위해 이번 주에 힘을 합쳤다”고 썼다.

파시스트 정당인 국민연합(RN)은 프랑스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의석을 곱절로 늘렸고 파시스트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다. 좌파 선거 연합인 신(新)민중전선은 결국 인종차별적이고 노골적으로 친기업적인 후보들에게 투표하라고 호소하고야 말았다. 바로 그런 자들의 정책이 극우가 성장하는 비옥한 토양이 됐는데도 말이다.

이제 진정한 교훈을 배워야 한다. 극우를 물리치겠다고 좌파가 중도·신자유주의 정치를 지지하면 오히려 우리 편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런 노선은 좌파가 노동자와 이주민에 대한 공격을 지지한 정치인들의 편에 서게 만들고, 극우에게 “권력층 반대” 세력을 자처할 기회를 내주게 된다.

진정한 해법은 더 많은 투쟁에, 민주당과 결별하고 저항에 기반한 혁명적 사회주의 정치를 건설하는 데에 있다.

출처 Tomás Tengely-Evans, 'How the failures of the US left helped Trump and the right revive' (2024. 7. 15) / 번역 김준호



바이든 지지는 트럼프에게 기회를 줄 뿐이다. 바이든과 버니 샌더스

지배자들이 당하는 폭력은 “자업자득” (맬컴 엑스)

토머스 크룩스가 도널드 트럼프 암살을 기도한 날, 미국산 미사일·폭탄·포탄이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을 살해했다.

세계 지도자들은 둘 중 한 폭력에만 경악했고, 그 폭력만을 규탄해 마땅한 일로 여겼다.

7월 15일 월요일 연설에서 바이든은 정치적 열정은 높아도 되지만 “폭력에 빠져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미국에는 이런 폭력이, 어떤 폭력도 설 자리가 없다. 절대, 결단코 없다. 예외는 없다. 우리는 이런 폭력이 일상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해 캠퍼스를 점거한 컬럼비아대학교 학생들을 보라. 이 학생들은 농성장을 침탈하려는 주방위군과 경찰을 상대로 캠퍼스에서 격전을

벌여야 했다.

군사화된 인종차별적 경찰이 휘두르는 폭력을 자기 동네에서 겪어야 하는 흑인들을 보라. 미국 제국주의에 학살당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유가족들을 보라.

지배자들은 폭력으로 구축된 체제를 지배하고 있으면서도 폭력이 자신들을 향하면 아연실색한다. 국내외에서 더할 나위 없이 야만적인 만행을 벌이는 사회 최상층의 무자비한 전쟁광들이 ‘폭력은 안 된다’고 아우성치는 것은 위선이다.

지배자들이 비난하는 폭력은 맬컴 엑스가 1963년 미국 전 대통령 존 F. 케네디 암살을 두고 말했듯 “자업자득이다.”

출처 Tomás Tengely-Evans, 'Violence is 'chickens coming home' to roost' (2024. 7. 15) / 번역 김준호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배한 나토 정상회의

지난주 워싱턴 나토 정상 회의는 과시와 위협으로 가득했다.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나토가 “세계사상 가장 위대한 동맹”이라고 선언하며 분위기를 잡았다.

그러나 바이든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를 그만 “푸틴 대통령”이라고 소개해, 자신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능력이 있음을 미국과 전 세계에 납득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줬다. 바이든의 악화되는 상태는 쇠락하는 서방 제국주의의 으름장 이면에 있는 취약성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이번 나토 정상 회의에서 발표된 성명서는 미국의 세계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들을 겨냥하고 있다. 그 성명서는 러시아를 여전히 “동맹국들의 안보에 대한 가장 심각하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지목할 뿐 아니라, 중국이 “러시아와 ‘무제한적’ 파트너십을 맺고 러시아 방위 산업 기반에 대규모 지원을 제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결정적인 조력자” 구실을 하고 있다고 규탄한다.

중국과의 대결

나토는 냉전이 절정에 이른 1949년에 창설된 이래 북아메리카와 유럽에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나토 지도자들은 이제 세계적 야심을 품고 있다. 네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일본, 남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의 정상들이 이번 나토 정상 회의에 참가했다. 도쿄에 나토 사무소를 열어서 중국과의 대결을 나토의

임무로 공식화하자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다. 퇴임을 앞둔 나토 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가 대표적이다.

지난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은 이렇게 말했다. “일본, 남한, 오스트레일리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퍼센트 국방비 지출을 달성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 역사적 일보 전진이다.” GDP 대비 2퍼센트 국방비 지출은 나토 회원국들의 목표치다. 설리번은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 “오늘날 미국과 유럽, 인도-태평양 사이의 관계는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고 밀접하게 얽혀 있다.”

예상대로 중국은 나토를 “냉전 시대의 유물”로 일컬으며 나토의 비난이 “편향돼 있고, 거짓 비방이자 도발”이라고 일축했다. “나토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미국이 꾸며낸 거짓말을 퍼뜨리고, 공공연히 중국을 헐뜯고, 중국과 유럽을 이간질하고, 둘 사이의 협력을 약화시키려 한다.”

여기서 중국이 유럽을 강조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중국 정부는 대(對)중국 교역과 투자에 여전히 크게 의존하고 있는 유럽연합이 미국의 대중 무역 전쟁에 전면 동참하는 것을 막으려 한다.

문구를 넘어서, 나토 정상 회의에서 실질적으로 논의된 사안은 우크라이나였다. 러시아를 상대로 한 나토의 대리전은 잘 풀리지 않고 있다. 러시아가 병력과 탄약, 공군력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 우크라이나군은 갈수록 궁지에 몰리고 있다. 러시아군은 핵심적인 도네츠크 지방으로 천천히 밀고 들어오고 있다. 우크

라이나에 다양한 무기를 보내고 있는 나토 회원국들은 이번 정상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방공 능력과 공군력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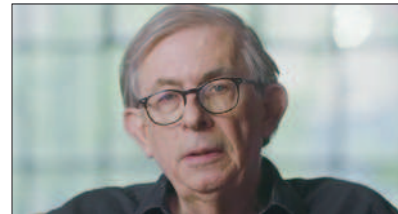
나토 정상 회의 성명서는 젤렌스키가 구걸하던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카드를 흔들어 보이며 젤렌스키의 애를 태웠다.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나토에 있다. ...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포함해 유럽-대서양으로의 온전한 통합으로 나아가는 불가역적인 길을 계속 지지한다.”

그러나 그 성명서는 바로 다음 문장에서 약속을 거둬들인다. “동맹국들이 동의하고 조건이 갖춰졌을 때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동맹 가입에 초청하는 입장을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한다.” 만에 하나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실질적 의제에 오른다 해도 그것은 모든 회원국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실패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대리전

더 근본적으로는, 미국 정부의 회보에 가까운 《포린 폴리시》가 지적하듯이 “이번 나토 정상 회의는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 전략에 있는 핵심 긴장을 여실히 보여 줬다. 서방의 군사 지원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군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게 하는 데서 핵심적 구실을 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이기게 하지는 못했다.”

미국 외교위원회(CFR)의 유럽 전문가 리아나 픽스는 이어서 이렇게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지적했다. “사실상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일부 전과를 올리지만 아예 승리하지는 못하고 계속 싸울 수 있게만 하고 있다. 이것은 진정한 전쟁 전략이 아니다.”

한편, 지평선에는 도널드 트럼프의 모습을 한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나토의 오랜 비판자인 트럼프는 지난주, 유럽이 미국만큼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않아 미국에 최소 1000억 달러를 빚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군사 전문가 엘드리지 콜비 등 적잖은 공화당 인사들이 이제 미국은 유럽 국가들이 자신의 군사적 필요를 알아서 충족하도록 내버려두고 중국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토요일 암살 기도 이전에도 여론 조사에서 바이든을 근소하게 앞섰다. 11월에 열릴 대선의 승자는 트럼프가 될 공산이 매우 크다. 나토는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하고 있다.

출처 Alex Callinicos, 'Nato summit was full of uncertainty' (2024. 7. 15) / 번역 이원웅

미국이 (러시아와 대결하기 위해) 독일의 재무장을 지지하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내려진 매우 도발적인 결정 하나는 미국이 독일에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은 2026년부터 SM-6, 토마호크, 개발 중인 극초음속 무기 등을 독일에 배치하기로 했다. 미국이 유럽에 중·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은 1987년 미국과 옛 소련 간 중거리핵전력조약(INF) 체결 이후 처음이다.

바이든은 “나토에 대한 미국의 공약”

을 안심시키려고 첨단 무기를 독일에 배치하기로 한 것이다.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의 사거리는 2000킬로미터가 넘는다. 베를린과 모스크바 사이의 최단 거리는 1600킬로미터에 불과하다. 장거리 극초음속 무기는 사거리가 2776킬로미터이며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피할 수 있다.

독일에 배치될 장거리 미사일은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만 타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니즈니노브고로

드, 페름, 우파, 사라토프, 카자흐스탄 서부 대부분 지역 등 유라시아 지역의 러시아 도시들에도 도달할 수 있다.

독일은 징병제를 부활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주요 유럽연합 회원국들도 러시아 도시를 타격할 장거리 공격 능력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독일·프랑스·이탈리아·폴란드 국방장관은 나토 정상 회의에서 자체 장거리 정밀 무기 개발 의향 선언에 서명했다.

20세기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벌였던 독일이 다시 재무장화의 최전선에 선 것이다. 사민당 소속 국방부 장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러시아의 침략 가능성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과 의지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 주기 위해 장거리 미사일 시스템이 필요하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군비 증강은 비단 ‘트럼프 방지 효과’만을 위한 것이

▶ 7면으로 이어짐

아리셀 참사

아리셀 사측은 책임 회피 골몰,
정부와 화성시는 수수방관

다수의 이주노동자를 비롯해 23명의 목숨을 앗아 간 아리셀 참사가 발생한 지 20일이 지났다. 그 사이 희생자 중 여덟 가정이 장례를 치렀다.

참사의 직접적 책임자인 아리셀 사용자 측(대표 박순관)은 시간을 끌며 유가족들을 압박하고 있다.

유가족협의회와 민주노총 등이 설립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7월 5일 아리셀 사용자 측과 산재 사망 보상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첫 교섭을 했다.

이 자리에서 사측은 “100퍼센트 사측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며 뻔뻔하게 나오더니, 이후 유가족협의회와 대책위의 교섭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면서 최근 사측은 유족들에게 개별적으로 '화재사고 보상 관련 사측 합의 제시안'이라는 문서를 휴대폰으로 보냈다.

이 문서를 단독 보도한 <충북인뉴스>에 따르면, 유가족들은 이 문서를 보고 “사람 죽여 놓더니 오히려 협박까지 한다”며 크게 분노했다고 한다. <충북인뉴스> 소속 기자의 배우자가 이번 참사의 희생자이기도 하다.

사측은 해당 문서에서 사망한 이주노동자들의 산재 보상금을 한국보다 임금이 낮은 중국 지린성 평균 임금으로 계산해 산정했다. 그동안에도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 시 출신국의 임금을 적용해 '목숨 값'을 차별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아리셀 사측은 사망한 중국 동포 노동자들이 재외동포 비자 소지자



죽음의 일터 7월 3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아리셀 참사 추모 집회

에게 허용되지 않는 '단순노무 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을 아리셀에서 했었다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 즉, 미등록 체류자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7월 19일까지 사측이 제시한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공탁하겠다고 압박했다.

희생자들에 대한 모욕일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체류 자격을 이용해 유가족들을 위축시키고 보상을 적게 하려는 것이다.

미등록 체류자로 인정되면 산재 보상금 산정 시 한국 평균 임금을 적용하는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사측은 바로 이런 조언을 받으려고 반

인권·반노동 행태로 악명 높은 김앤장 로펌을 변호인으로 선임했을 것이다.

사측은 이 문서를 한 한국인 희생자 유가족에게도 보내는 황당한 일도 저질렀다. 희생자 한 명 한 명에 대해 도통 관심이 없다.

한편, 화성시는 유가족들의 숙식비 지원을 현행 기한에서 더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희생자의 직계 가족 지원은 이번 달 말까지고, 그 외의 친인척 지원은 7월 10일로 이미 종료됐다. 화성시장 정명근은 민주당 소속이다.

유가족협의회와 대책위는 이런 방침에 반발해 숙식비 지원 연장을 요구하며 9일 화성시장실 앞 농성에 돌입했었다. 다음 날 화성시의 지원 유지 약속을

받았다고 발표하고 농성을 풀었으나, 화성시는 대책위의 해석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리셀 사측이 시간을 끌며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이주민 희생자의 유가족들이 한국에 체류하며 이에 맞서는 활동에 동참하려면 숙식비 지원이 필요하다. 화성시의 지원 중단은 사측을 편드는 매물찬 결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참사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며 잠시 요란을 떨더니, 조용히 뒤로 물러서 있다. 12일부로 중대본을 해체하고 대책지원본부로 전환했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을 유가족 숙식비 지원 같은 문제조차 강 건너 불구경이다. 대책지원본부는 도대체 무엇을 지원한다는 것인가?

아리셀 공장에서 이전에도 동일한 형태의 사고가 반복됐음이 드러났다. 심지어 불법 파견 정황도 드러났다. 그런데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은 정부에 있다. 그런 책임은 이행하지 않아 놓고 이제는 희생자와 피해자 지원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다.

유가족협의회는 앞으로 에스코넥·아리셀 공장 앞 규탄 시위와 대표이사 항의 행동에 나서고, “수사 진행과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까지 [항의를] 확대”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아리셀 사측과 정부·지자체가 참사에 제대로 책임지게 하려면 항의 행동이 기층에서 확대돼야 한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의 주체적 참여를 고무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준형

▶ 6면에서 이어짐

아니다. 트럼프의 재선 여부와 관계없이 유럽 국가들은 최근 몇 년 동안 미국과의 군비 지출 격차를 줄이려 해 왔다.

바이든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대통령에 당선된 해인 2020년에 9개 나토 회원국만이 국내총생산(GDP)의 2퍼센트를 국방비에 지출했다. 올해는 23개국이 최소 2퍼센트를, 다른 일부는 그 이상을 지출할 것이며, 아직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나머지 국가들

도 곧 도달할 것이다.”

그러나 전쟁광들은 만족할 줄 모른다. 스웨덴 전 총리 칼 빌트는 유럽 국가들이 그 목표를 두 배 더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각국 싱크탱크들은 새로운 전략 계획을 시행하려면 3.6퍼센트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사일과 전투기를 위해 사회 복지 지출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이든도 러시아의 무기 생산을 따라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동

맹이 뒤처지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이런 군비 증강 노력이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 나토가 언제든지 미사일 공격을 할 수 있다고 러시아에 전쟁 위협을 가하는 것이고, 유럽과 나머지 세계를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빠뜨리는 것이다.

러시아는 즉각 “(러시아) 국가 안보에 매우 심각한 위협”이라며 군사적 대응을 시사했다. 외무차관 세르게이 라브코프는 “이 새로운 게임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러시아 미사일 부대가 베를린·런던·파리·로마·마드리드를 신속하게 폭격할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세계가 재앙적인 핵전쟁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된다는 뜻이다.

김인식

이 기사는 워싱턴에서 개최된 나토 정상회의의 결과를 다룬 기사의 일부다. 기사 전문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민중전선 — 파시즘에 맞서려면 반드시 필요한 연합인가?

최일봉

파시스트를 비롯한 유럽 극우가 — 프랑스의 마린 르펜, 독일의 독일을위 한대안(AfD), 이탈리아 총리 조르자 멜로니의 이탈리아형제당 등 — 얼마 전 유럽의회 선거에서 무려 900만 표를 얻으며 전진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와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도 극우의 지지를 받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과 전 세계의 극우가 환호하며 기세가 오를 것이다.

기성 보수 정당 내에서도 우파가 전진하고 있다. 영국 보수당의 수엘라 브래버먼, 독일 기독교민주연합(CDU)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등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국민의힘이 매우 우익적이기는 하지만 파시즘 정당은 아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선진 자본주의 세계의 정치적 경험을 회피하지 않고 직시한다면, 국힘이나 그 일파도 마치 미국 공화당이 트럼프에 의해 장악되기를

거듭하고 있듯이 극우에 의해 지도될 수 있고 그럼으로써 파시스트 성장의 자양분을 제공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공화당이 파시즘 정당은 아니다. 극우가 주도하고 있기는 해도 말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 전 우리는 프랑스 총선 결선 투표 결과를 보고 기뻐하며 크게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신나치가 두터운 간부층을 이루고 있는 RN, 즉 국민연합이 1등을 해서 집권한다면 국가의 최고위 공무원들, 즉 국가 관료 수백 명을 자르고 새로 임명할 권한을 갖게 된다. 경찰을 통제하게 된다. 교육 분야도 그들 수중에 넘어가게 된다.

무슬림들과 흑인들, 이민자들은 더욱 억압받게 된다. 성소수자들도 더욱 억압받고 천대받게 된다. 투쟁적인 노동조합 활동가들도 탄압을 받게 될 것이다. 거리에서 소수 인종들을 향한 파시스트들의 집단 구타도 늘어날 것이다.

인접국 독일의 AfD, 즉 독일을위한 대안과 이탈리아 총리 조르자 멜로니, 미국의 트럼프를 비롯해 세계 곳곳의 파시스트들과 극우들이 기세가 올라



7월 7일 총선 2차투표 결과에 기뻐하는 프랑스 좌파 지지자들

노동자 등 각종 차별받는 사람들에 대한 위협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국민연합이 패배한 것을 기뻐하지 않고 ‘뭘, 별것 아닌 일 갖고 왜 그러냐’ 하며 둔감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은 참 딱한 사람들이다.

기뻐하고 안도해야 마땅하다. 이역만리 한국에 사는 우리조차 말이다.

그럼에도 지금 좌파는 절대 경계의 고삐를 늦춰선 안 된다. 그리고 신나치 퇴치를 좌파 연합인 신민중전선에 맡길 일이 결코 아니라는 점도 생각해 봐야 한다.

파시즘의 독특한 성격

파시즘 등 극우가 계속 전진하고 있는데, 파시즘은 여느 극우와 다르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역사적으로 좌파들은 대부분 파시즘을 그저 독재 정권의 하나로 봤다. 그 바람에 파시즘의 진정한 특성을 간과했다.

파시즘은 모든 좌파 조직과 모든 독립적 노동자 조직을 **깡그리** 분쇄할 목적을 갖고 있는 운동이다. 그리고 **민주주의적 권리들도** 철폐할 목적을 갖고 있다.

이것은 박정희도, 전두환도 하지 못했던 일이고 윤석열은 더더욱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일이다. 윤석열 정부가 비록 매우 우익적인 막된 자들이기는 해도 파시즘 정부라면 본지가 이렇게 공공연히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논조의 기사를 발행할 수 없을 것이다.

파시즘 국가가 좌파 단체와 자주적 노동단체, 민주적 권리를 그처럼 여지없이, 효과적으로 공격해서 없애 버릴 수 있는 것은 파시즘이 **대중** 운동이기 때문이다. 파시즘은 **중간계급** 대중의 운동이다. 즉, 중소 상공인과 소자본가, 의사·변호사, 각종 기관의 중·하급

관리자, 자영 농민 등이 열성적으로 참가하는 대중 운동이다.

경제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노동계급 운동이 별로 강력한 대안으로 비쳐지지 않으면 중간계급은 절망감을 느끼며 기성 주류 정당들의 배신에 격노한다. 그리고 옛 질서를 회복할 철권 통치를 갈망한다. 바로 이런 일이 1920년대 초·중반 이탈리아와 1930년대 초·중반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 일어난 일이다. 또한 지난 몇 년 사이에 세계 여러 곳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때(경제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노동계급 운동이 별로 강력한 대안으로 비쳐지지 않는 시기) 흔히 중간계급은 노동계급 조직들과 좌파 조직들이 자신의 불행에 책임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된다. 그때 파시스트들은 자기네가 대자본과 노동계급 모두에 반대한다며 중간계급 대중을 동원하고 조직할 수 있다. 중간계급 사람들은 평상시에 개인으로 원자화돼 있으므로 파시스트들이 대규모 거리 집회와 행진



나치당을 지배한 히틀러. 파시즘은 그 목적과 효과 면에서 여느 극우와 다르다

으로 그들을 동원하면 엄청난 자신감을 얻게 된다.

가령 히틀러의 나치당은 당명 자체가 데마고기였다: 독일 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당. 그러나 사회주의 정당도 아니고 노동자 정당도 아니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대문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는가? “노동은 우리를 해방시킨다.”

오래지 않아 한국에서도 파시스트들이 부상한다면, 그자들은 ‘재벌’을 비난하고 ‘민중의 정당’을 표방할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재벌들의 미움을 살까 봐 그럴 용기가 없다면 한국에서 파시스트 정당은 성공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이다. 물론 북한을 의식해 ‘자유’나 ‘민주주의’나 ‘민족’ 등은 기본으로 표방하겠지만 말이다.

그런데 이렇게 대자본에도 반대하고 노동계급에도 반대한다며 활동하다가 집권 가능성이 보이게 되면 난처한 일이 생기게 된다. 왜냐하면 파시스트들이 인수하려는 기존 국가는 자본주



사진 출처: Photothèque Rouge

대규모 거리 시위·행진, 파업이 파시즘에 맞선 효과적 수단. 6월 15일 파리의 국민연합 반대 시위

의 국가이므로 대자본가 계급, 즉 지배 계급이 궁극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파시스트들의 중간계급 기반은 더욱 모순에 처하고 결국 내부 갈등을 빚게 된다. (카를 마르크스는 중간계급과 그 소속 인물들의 핵심 특징이 모순과 좌우로 왔다갔다하기라고 지적했다.)

중간계급 기반의 이런 모순과 내부 갈등 때문에 히틀러는 1934년 5월 친위대 SS를 시켜 정규군으로의 통합을 거부하는 돌격대 SA의 에른스트 뢰름 등 간부 수백 명을 살해했다.

이런 규모의 숙청은 아니지만, 프랑스의 파시즘 정당 국민연합의 실질적 지도자 마린 르펜은 2015년 국민연합의 창립자인 아버지 장마리 르펜과 (그가 홀로코스트 입장 드러낸 문제를 두고) 싸우고 (정상적인 선거 정당으로 보이기 위해) 그를 당에서 내쫓았다.

독일을위한대안 AfD의 핵심 간부들은 파시스트들인데 AfD는 지난 5월 당의 유럽의회 의원 막시밀리안 크라의 히틀러 친위대 변호 입장을 놓고 예리

하게 내분을 겪고 있다.

이런 사회적 기반의 모순 때문에 파시스트 운동은 엄청난 대규모 거리 집회와 행진을 조직하는 등 막강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매우 약체일 수 있다.

그러나 파시즘의 실체가 약체라는 점은 누군가가 들춰 내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 것이므로, 좌파는 드러내어 입증해야 한다. 그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방법은 파시스트들에 맞서 그들보다 훨씬 더 큰 거리 집회와 행진, 대규모 파업을 조직하는 것이다.

파시즘은 토론과 논쟁으로 물리칠 수 없다. 절망과 격노, 비탄에 빠진 중간계급 대중의 운동으로서 거리 행진과 폭력을 무기로 삼기 때문이다.

법을 개정해 정당을 강제 해산시켜도, 선거에서 패배시켜도, 파시즘은 좀비처럼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경제·정치 위기가 질질 끌고 되풀이되는 한은 좀비 자본주의의 필연적 부산물인 파시즘도 좀비처럼 죽지 않고 틈날 때마다 공세를 재개할 것이기 때문이다.

민중전선의 본질

이제 파시즘에 맞서는 마치 거의 유일한 방법처럼 알려진 민중전선에 대해 살펴보겠다. 마침 파시즘이 가장 전진하고 있는 프랑스에서 신민중전선이라는 반파시즘 선거 연합이 결성됐다. 프랑스 신민중전선은 (1930년대 중반의) 옛 민중전선을 모델로 결성된 것이다.

혁명적 좌파의 일부(가령 이언 버철, 크리스 뱌머리 등)는 프랑스의 신민중전선에 과거 급진당 같은 정당이 주요하게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신민중전선이 옛 민중전선과는 다른 순전한 좌파 연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회당(과 그 계열 단체들)은 1930년대의 사회당과 다르다. 사회당은 자타가 공인한 ‘(사회적)자유주의’ 중도좌파 정당이고, 올랑드를 비롯한 그들은 1990년대 말 이후 오랫동안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시행해 오다 ‘극단적 중도’라는 조롱 섞인 별명을 들으며 몰락했다. 게다가 이민·난민·무슬림·흑인 등에 대한 인종차별을 자행해 왔다. 바로 사회당 노선이 마크롱 정치를 낳았고, 마크롱 정치가 국민연합의 성장에 일조했다.

옛 민중전선의 진화를 살펴보면 그런 정치의 내재적 논리를 알 수 있다.

옛 민중전선은 독일 나치즘의 해외 확산을 막겠다며 1935년부터 1939년까지 스탈린주의자들(소련 공산당을 비롯한 국제 공산당들의 지도부들)이 채택한 전략이었다.

‘전선’이라는 말은 상이한 정치 조직들의 연합을 뜻한다. 그러므로 민중전선은 민중 연합 또는 좌파 연합으로 바뀌 부를 수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과 중

간계급의 계급 동맹을 위해 좌파 정당들과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정당들의 (연립 정부 수립 목적의) 선거 연합이 민중전선의 본질이다. 그러므로 민중전선은 계급 협력 기구이다. 그리고 이 연합을 지배하는 정치는 중도적(대개 중도좌파) 정치이다.

1935~38년 프랑스 민중전선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것은 프랑스 공산당이었지만, 당시에 공산당은 중도좌파 정당으로 행동했다. 지금 프랑스의 신민중전선을 지배하는 것도 사회당과 그 계열 단체들의 중도좌파 정치다. 장뤼크 멜랑송은 신민중전선 안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1930년대 중엽 민중전선 안에서 프랑스 공산당은 사회당의 주도와 의회 공화국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자본가들의 위신을 존중했다.

또, 애국주의를 받아들여 스스로 프랑스 민족주의를 자처하며 자코뱅을 미화했다. 군 장교가 되는 것을 찬양·고무했고,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찬양했다. 노동자들의 조건을 희생시켜 추진하는 군비 증강을 지지했다.

또한 결혼과 어머니 뱃속을 찬양했고, 성별에 따른 공적 행동을 찬양했다.

민중전선이 알제리 무슬림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했다가 지키지 않았을 때 프랑스 공산당은 침묵했다.

1930년대 중엽 프랑스 민중전선 문제를 놓고 소련 출신 혁명적 사회주의자 트로츠키가 소련과 국제 공산당들의 기회주의를 비판한 것을 살펴볼 가치가 있다.

▶ 10면으로 이어짐



1936년 프랑스 민중전선 지도자들. 사회당 레옹 블룸(왼쪽 두 번째)과 공산당 모리스 토레즈(왼쪽 세 번째)

▶ 9면에서 이어짐

옛 민중전선

트로츠키는 스탈린주의자들의 종파주의적 회피(사회민주당을 파시즘의 일종으로 보고 나치 공동전선 구축을 거부했다) 덕분에 1933년 히틀러가 무사히 집권한 것을 보고 공산당들의 역할이 반혁명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렸다. 1936년 민중전선 집권 당시 프랑스는 혁명일보직전 상황이었으므로, '반혁명적'이라는 성격 규정은 과장이 아니었다.

스탈린주의자들은 사회민주주의가 "파시즘의 좌파적 변형"이므로 사실상 노동계급의 '주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1931년 여름 독일 프로이센 주에서 나치가 사회민주당 정부에 대한 불신임 국민투표를 발의했을 때 공산당은 나치 편을 들었다!

스탈린주의자들의 '분석'인즉, 사회민주주의가 파시즘의 방어벽 구실을 하고 있으므로 먼저 사회민주주의를 패퇴시켜야만 비로소 파시즘을 패퇴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덕분에 히틀러가 저항을 받지 않고 너무도 손쉽게 집권했다. 이제 트로츠키는 공산당들 안에서 좌파적 분파를 만들려던 노력을 포기하고 새로운 공산주의 정당을 창건하기로 마음먹었다.

트로츠키는 반파시즘 공동전선의 필요성과 사활적 중요성을 주장했다.

공동전선은 민중전선과 전혀 다르다. 민중전선은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정당과의 공동 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연합이다. 반면 공동전선은 제한된 구체제 쟁점을 둘러싸고 기층에서 공동행동을 벌이기 위한 투쟁 기구이다.

1934년 여름까지 스탈린주의자들은 초좌파적 종파주의 노선(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사회파시즘론에 따른')을 고수했다. 그러나 1934년 가을 그 범죄적 노선을 버리고 정반대로 계급 협력 노

선으로 돌아섰다. 그런 방침이 바로 민중전선이었다.

민중전선에는 사회주의적 정당들뿐 아니라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정당들도 참여했다. 후자는 특히 급진당이 중요했다. 급진당은 중간계급에 기반을 두었고, **당명과 달리**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정당이었다.

스탈린주의자들은 민중전선을 민중의 연합, 즉 노동계급과 중간계급의 연합이라고 규정했다. 그래서 노동계급의 단결을 추구하는 동시에 잠재적인 파시즘 동조자들(중간계급 사람들)을 끌어당긴다는 것이었다.

노동계급과 중간계급의 관계

이에 반대해 트로츠키는 자본주의 정당과의 협약에 의해서는 중간계급을 노동계급 편으로 끌어당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간계급이 노동계급의 적이 아님을 전제하면서, 그들을 끌어당기려면 그들이 지지하는 자본주의적 정당들과 오히려 비타협적으로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로츠키의 말을 직접 인용해 보겠다.

“중간계급은 극단주의에 놀라 뒤로 나가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가장 강력하고 가장 결연한 지도를 제공하는 사회 세력에게 끌린다. 그러므로 중간계급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노동계급이 파시스트들보다 강력해야 한다. 그러려면 노동계급이 자기 자신의 힘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노동계급의 혁명적 투쟁을 약화시키는 것은 중간계급을 반동 쪽으로 넘겨주는 것이다.”

프랑스 민중전선의 결정적 시험대는 1936년 5월 총선에서 민중전선이 승리해 정부를 구성하면서였다. 민중전선



1936년 파업과 작업장 점거가 분출했으나, 공산당이 그 기세를 꺾는 결정적 구실을 했다

정부는 반파시즘과 사회 개혁을 강령으로 제시했고, 사회당과 급진당이 주축을 이뤘다. 공산당은 연립 정부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그 바깥에서 의회적인 다수 정당으로서 실질적으로 민중전선을 지지했다.

그보다 두 달 반 전인 1936년 2월에 스페인 민중전선이 총선에서 승리해 취임한 여파 속에서 등장했으므로 프랑스 민중전선 정부에 대한 노동계급의 기대는 어마어마하게 컸다.

노동자들은 민중전선 정부 출범 직후인 6월 광범한 파업과 작업장 점거에 들어갔다. 주로 경제적 요구들을 내놓았지만 **경제적 요구들만 내놓은 것은 아니었다. 파시즘 척결 등 사회 변화와 직결된, 정치적 요구들도 내놓았다.**

민중전선 정부는 6월 7일 노사정 협약인 마티농 협약으로 노동자들을 달래려 했다. 노동자들은 주 5일제 등 일정한 양보를 얻었지만, 파시즘의 위협을 분쇄하고 사회 자체를 변화시키려 하는 등 훨씬 더 나아가려 했다.

당시에 트로츠키는 프랑스 상황이 혁명적이라고 규정하고 상황이 '파시즘이냐 노동자 혁명이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노동자들의 작업장 점거 파업이 노동자 소비에트 건설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민중전선은 내부적으로 너무

불균등해서 파시즘에 맞서는 효과적인 세력이 못 되고 오히려 노동자들을 사용자들에게 예측시켜 혁명적 상황 전개에 장애물 노릇을 한다고 트로츠키는 지적했다.

실제로 민중전선 정부는 사용자들이 마티농 협정을 지키지 않고 심지어 뒤집는 것을 사실상 수수방관했다.

공산당은 공산당대로 파시즘과 나치 독일에 반대하는 정부에 충성하고자 사용자들의 반격에 실질적 저항으로 대응하기를 기피했을 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전투성과 기세를 꺾는 데 오히려 결정적 역할을 했다.

노동자 투쟁의 힘이 약화되자 1938년 11월경 민중전선은 내부의 우파가 득세하는 상태가 됐다. 그래서 민중전선 정부는 주 6일 노동의 부활을 입안하고 그밖에도 다른 여러 반노동적 조처들을 시행했다. 공산당이 주도하는 노동조합총연맹 CGT는 이제 효과적 저항은 전혀 일으키지 못하는 신세가 됐다.

그리고 1939년 공산당은 그나마 민중전선의 동맹들이 주도하는 의회에 의해 불법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1940년 독일의 침공 후, 공산당이 빠진 민중전선이 지배하는 의회는 나치 꼭두각시인 비시 정부의 수립을 찬성했다.

공동전선이야말로 필요하고 중요하다

프랑스와 거의 같은 시기에 스페인에서도 민중전선 정부가 들어섰지만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실패했다. 거기서는 무수한 희생과 더 참혹한 비극을 낳았다. 당시 스페인 상황은 이중권력과 내전이라는 물리적이며 더 첨예한 충돌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1970~73년 칠레 민중전선(민중연합이 정식 명칭이었다)의 경험도 마찬가지였다.

아프리카국민회의라는 남아공 민중전선의 정부는 1994년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민중에게 조금씩 신자유주의 독약을 먹였다. 그 결과 올해 총선에서 과반 득표에 크게 못 미치며 단독 집권에 실패했다. 흑인 노동계급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현재 프랑스의 신민중전선은 승리를 거머쥐어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다. 그러나 중도파가 복귀하고 새 정부가 자본주의의 안정에 기여하려 애쓰다면 신민중전선은 파시즘의 재기를 막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파시즘의 재기에 의도치 않게 일

조하는 셈이 될 것이다.

파시즘은 좌파들의 선거 연합으로는 분쇄할 수 없다. 물론 프랑스의 혁명적 좌파는 선거에서 신민중전선에 투표하는 것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근래에 극우가 가장 큰 성공을 거두는 영역이 선거이므로 프랑스의 혁명적 좌파는 선거에서도 극우에 맞서야 한다.

그러나 훨씬 중요한 것은 파시즘이 거리의 대중 운동이니만큼 그들에 반대하는 거대한 거리 시위와 행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규모 파업이 수반

되면 더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선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리와 일터에서의 투쟁이다. 국민연합에 맞서 동료 노조 활동가들, 좌파 정치단체들, 지역 단체 등을 단결시켜 극우의 공세를 저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최대한 폭넓은 대중 운동을 건설하려 해야 한다.

이것이 공동전선이고 바로 민중전선의 대안이다. 좌파적이고 투쟁적인 대안. 그리고 결국엔 지지자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 주게 마련인 민중전선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근본적 사회변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도울 수 있는 공동전선 말이다.

(NFP) 신민중전선과 ‘복종하지 않는 프랑스’의 타협과 양보는 불가피했는가?

(LFI)

7월 7일 프랑스 총선 결선 투표에서 신민중전선이 1위를 하고 파시스트 정당 국민연합(RN)이 예상과 달리 3위로 내려앉자, 프랑스 안팎에서 가슴을 졸이던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안도했다.

매스 미디어는 신민중전선을 결성하고 결선에서 심지어 마크롱계 후보들과도 후보 단일화를 한 게 국민연합이 승리하는 것을 막는 데에 유효했다고 보도한다.

신민중전선의 134명 후보가 단일화를 위해 사퇴했다. 그들은 대부분 반동적이고 역겨운 마크롱계 후보들과 경합했어야 했을 지역구 후보들이었다. 덕분에 마크롱 주도의 선거 연합(양상블)은 168석을 얻어 2위를 했다.

그러나 2017년까지만 해도 의원이 8명밖에 안 됐던 국민연합이 정부 구성을 위협할 만큼 성장한 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세력은 마크롱 정부다. 신민중전선은 파시즘의 부상을 막는 데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으로 드러난 공화주의자들을 부활시킨 것이다.

마크롱 정부는 프랑스 노동계급을 분열시키려고 인종차별과 이슬람 혐오를 의도적으로 이용했다. 예컨대, 학교에서 하잡 착용 금지에 이어 얼마 전에는 아바야(무슬림 여성들이 입는 헐렁한 전신 길이 의상)를 입는 것도 금지했다. 이런 인종차별이 파시스트들의 성장 동력이 됐다.

또, 마크롱 정부는 노동계급을 상대로 신자유주의적 연금 개혁 공격을 했다. 수많은 프랑스 노동자들이 연금 개혁안에 반대해 파업했다. 2023년 1월 19일 파리 등 프랑스의 주요 도시들에서 200만 명이 파업하고 거리로 나왔다. 3월 7일에는 약 350만 명이 시위에 참가했다.

그러나 이 투쟁은 중단됐다. 노동조합들인 프랑스 노동총연맹(CGT)과 민주노동자총연맹(CFDT)의 지도자들이 마크롱 정부 퇴진 투쟁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이다.

마크롱 정부가 이런 정책들을 시행하면서 사람들의 환멸이 커지자 파시스트들은 엘리트들에 반대해 서민을 지키는 세력임을 자처했다.

따라서 신민중전선이 1위를 하고 국민연합이 3위를 한 투표 결과가 상황의 전부는 아니다.

오히려 마크롱계 세력들이 되살아난 것은 파시스트의 최근 위협을 야기했던

정치적·사회적 자양분이 다시 공급될 수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비록 승리에 제동이 걸렸지만 국민연합이 획득한 의석은 역사적 수준이다. 국민연합 지도자 르펜은 결선 직후 “승리가 연기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극우의 물결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도 했다.

타협

오른쪽으로는 타협의 악순환은 신민중전선 내부에서도 이뤄졌다. 장뤼크 멜랑송의 급진좌파 정당 ‘복종하지 않는 프랑스(LFI)’는 쥐 죽은 듯이 지내야 했던 사회당에 산소마스크를 달아 줬다.

“이번 결선 투표는 신민중전선 내에서 복종하지 않는 프랑스(LFI)와 사회당(PS) 간의 균형도 뒤흔들었다. 사회당은 59석을 확보해 2022년(31석)에 비해 의원 수가 거의 두 배로 늘어났다. 74석을 얻은 LFI(이전에는 75석)에 바짝 다가섰다. LFI는 여전히 좌파의 선두 그룹이지만 더는 동맹 내에서 확고하게 지배적인 위치에 있지는 않다.”(〈르 몽드〉, 7월 7일 자)

요컨대, 신민중전선은, 사회당 소속 전 대통령 프랑수아 올랑드의 집권 시절에 파시즘이 성장하는 토양이 됐던 정책들을 집행한 자들에게 유리하게 타협한 것이다.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질수록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압력도 더욱 커졌다. 신민중전선 내 ‘온건파’는 선거 승리를 위해 급진좌파의 요구를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내재적 논리 때문에, 신민중전선이 파시스트들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환상이며 지지자들 사기 저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국민연합을 저지할 수 있는 힘은 좌파의 그럴듯한 선거 강령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거리와 일터에서 인종차별 반대와 파시즘 반대 공동전선을 구축해 실제로 싸우는 것에 달려 있다.

이번에 파시스트의 집권을 저지한 직접적인 요인은 6월 15일과 16일에 거리로 쏟아져 나온 80만 명의 시위였다. 이런 동원 덕분에 자신감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투표장에도 나가 투표율이 67퍼센트까지 올랐다. 2022년 총선 투표율은 46퍼센트, 2017년은 43퍼센트였다.

김인식



“파리의 쓰레기들” 2023년 연금 개혁 반대 시위에서 등장한 마크롱 정부 규탄 팻말

공개 토론회



더 많은 공개 토론회
상세 정보

관심 있는 주제, 가까운 지역을 찾아보세요

정치적 올바름(PC)을 둘러싼 논란 - 어떻게 볼 것인가?

일시 7월 25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서울 홍사단 3층 강당 (혜화역 1, 2번 출구 사이 위치)

발제 양효영 (트랜스젠더 차별과 해방) 공저자

외국인 참가자를 위해 전문 통역사의 영어 동시통역 제공

참가비 5000원 (학생, 난민 3000원)

주최 노동자연대 서울 동부 지역 모임들 문의 010-8862-8377 / s-east@ws.or.kr

정치적 올바름(PC)을 둘러싼 논란 - 어떻게 볼 것인가?

일시 7월 24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서울 한겨레교육 703호 (신촌역 6번 출구 도보 5분)

발제 양효영 (트랜스젠더 차별과 해방) 공저자

외국인 참가자를 위해 전문 통역사의 영어 동시통역 제공

참가비 4000원 (학생, 난민 3000원)

주최 노동자연대 서울 서부 지역 모임들 문의 010-8074-2793 / s-west@ws.or.kr

아랍 정부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친구인가?

일시 7월 18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인천 부평 힐스대관스튜디오 (부평역 7번 출구 도보 10분)

발제 박이랑 중동 문제 전문지 <미들이스트 솔리더리티> 공동편집자

마이준 이집트인 정치 난민 전문 통역사의 아랍어-한국어 순차통역 제공

참가비 4000원 (학생, 난민 3000원)

주최 노동자연대 인천 지역 모임 문의 010-6224-2157 / incheon@ws.or.kr

파시즘의 귀환 - 1930년대로 돌아가는가?

일시 7월 17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경기 마이크로웨이브공유오피스 수원점 mi이호

발제 김인식 <노동자 연대> 발행인 (수원역 7번 출구 도보 5분)

참가비 5000원 (학생, 난민 3000원)

주최 노동자연대 경기 지역 모임 문의 010-4738-2407 / kyongi@ws.or.kr



네타냐후는 가자지구를 재점령하고 싶어 한다

이스라엘은 미국 등 서방이 생산하고 지원한 폭탄·전투기·드론으로 가자지구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7월 13일(이하 현지 시각) 팔레스타인인 피란민이 밀집해 있는 칸 유니스 알마와시에 대규모 공습을 퍼부었다. 팔레스타인인들이 최소 90명이 죽고 300여 명이 다쳤다.

알마와시는 이스라엘군이 '인도적 구역'으로 설정하고 피란민들에게 대피하라고 명령했던 곳이다.

알마와시 학살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자행한 최악의 공격 중 하나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학살이 하마스 군사조직 알카삼 여단의 지휘관 무함마드 데이프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에 이스라엘군은 철박한 팔레스타인인 난민들을 보호하는 학교들을 거듭 공격하고 있다. 학교가 운영하는 피난처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격은 7월 둘째 주에만 다섯 번 이뤄졌다.

14일에도 유엔이 누세이라트 난민촌 내에서 운영하는 학교 아부 오라이반을 공격해 최소 17명이 사망하고 80명 넘게 부상당했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여성과 어린이였다.

같은 날 이스라엘군은 가자시터를 공습해 최소 17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다.

그러자 7월 14일 하마스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는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이스라엘군이 최근에 공격한 곳들은 진작에 하마스를 제거했다고 선언한 지역이다. 그러나 저항 세력들이 돌아온 것이다. 하마스와 그 동맹인 이슬라믹 지하드는 자신의 전사들이 기관총·박격포·대전차미사일 등을 이용해 이스라엘군과 싸우고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패퇴시켰다고 여러 차례 선언했지만 가자전쟁의 종전은 임박하지 않은 듯하다. 이스라엘군의 가자 주둔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재점령

“현재 진행 중인 인종 학살, 가자지구 파괴, 팔레스타인인들의 기아, 생계 수단의 대대적 파괴는 이스라엘의 전략적·안보적 고려와 결부돼 있는데, 그것은 팔레스타인인을 고향 땅에서 쫓아내려는 목적으로 가자지구를 재점령하는 것이다.”(알 자지라, 7월 4일 자)

즉,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최대한 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을 청소하려는 것이다.

네타냐후는 내각 내 극우파들의 가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패퇴시켰다고 여러 번 선언했지만 참말이 아니다

자지구 재점령과 정착촌 건설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를 남북으로 갈라놓는 '넛자림 회랑'을 따라 전진 기지 3곳을 건설했다. 가자 지구에 계속 주둔하는 상황에 대비한 포석인 듯하다.

중동연구소의 예알 루리-파르데스는 이스라엘의 계획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스라엘군은 [서안지구처럼] 인구 밀집 지역 외곽에 주둔하지만 언제든지 소규모 급습이나 작전을 할 수 있다.”(알 자지라, 7월 4일 자)

이스라엘이 철군하지 않을 수 없는 쪽으로 정책을 극적으로 바꾸거나, 가자지구에서 예상치 못한 참패를 당하지 않는 한 이스라엘군은 계속 가자지구에 주둔할 듯하다. 이스라엘의 입장

에서는 다른 탈출구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 등 서방 지도자들은 듣기 좋은 말만 할 뿐,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을 막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바이든은 지난주 나토 정상회의에서 “가자 휴전의 큰 틀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이 합의했다”며 “전쟁이 지금 당장 종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 무기들이 이스라엘로 향하고, 그 무기들로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인들을 죽이고 있다.

미국·이스라엘·이집트의 정보기관 수장들이 휴전 협상을 위한 물밑 접촉을 하는 사이에 가자지구에서는 시체들이 계속 쌓여 가고 있다.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거리 투쟁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김인식

국제 의학 학술지 《랜싯》 기고문

“팔레스타인인 사망자 수가 18만 6000여 명이 될 수도 있다”

저명한 의학 잡지 《랜싯》에 발표된 글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으로 인한 실제 사망자 수가 18만 6000명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스라엘 당국은 가자지구 보건부가 발표한 사망자 수인 3만 7396명조차 부풀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스라엘 정보기관까지도 그 수치가 정확하다고 시인했는데 말이다.

《랜싯》에 실린 글은 이렇게 시사한다. “현재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총돌로 인한 사망자 수가 18만 6000명에 이르거나 심지어 그 이상일 것이라고 추정해도 억측이 아니다.”

이스라엘 정권은 의료 시설을 파괴하고, 식량·물 공급을 끊고, 폭격 지역에서 피란하기 어렵게 하는 야만적인 행위를 저질러 왔다.

가자지구 주민 약 50만 명이 굶주리

고 있다. 이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더욱 키우고 있다.

《랜싯》에 실린 글은 최근 전쟁에서 간접적 사인에 따른 사망자(전쟁의 영향 때문에 사망한 사람들) 수가 직접적 사인에 따른 사망자의 3~15배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유엔은 가자지구 내 건물의 35퍼센트가 파괴됐다고 추산한다. 그리고 약 1만 구의 시신이 그 잔해에 깔려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한다.

《랜싯》은 직접적 인명 피해와 간접적 인명 피해의 비율이 1대 4라는 보수적 추정 방식을 적용해, 가자지구 보건부의 사망자 수치에 유엔의 추정치를 더한 후 4를 곱했다.

사망자 수가 최소 18만 6000명에 이를 수 있다는 추정이 맞다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주민의 7.9퍼센트를 살해

하는 셈이다.

참상은 계속되고 있다. 인종학살 공격이 9개월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폭격으로 팔레스타인인 27명을 더 살해했다.

7월 6일 이스라엘군은 대피소로 사용되던 자오우니 학교를 표적 폭격했다. 누세이라트 난민촌에서 유엔이 운영하던 이 학교에 대한 이번 공격으로 최소 16명이 사망하고 75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번 주 이스라엘군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가자지구 사무소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UNRWA 집행위원장 필리프 라자리는 분노를 터뜨렸다. “날마다, 달마다 공격이 벌어진다. 또 다른 학교가 공격당했다.”

이스라엘군은 공격을 정당화하려고 UNRWA 사무소에 하마스의 무기와

물자가 보관돼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인들이 그 지역에서 도망쳐 나온 만큼, 이 공격은 명백히 이스라엘의 잔혹한 지배 체제를 계속 확대하는 것의 일환이다.

이스라엘은 휴전 논의가 오가는 상황에서 만행의 규모를 키웠다. 7월 8일 월요일 이스라엘 재무장관 베잘 펄스모트리치는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가 휴전 합의를 거부할 것이라고 시사하며 이렇게 말했다.

“끝을 눈앞에 두고 지금 멈춰서 저들에게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싸울 기회를 주는 것은 많은 피를 흘려 일궈낸 전쟁의 성과를 무로 돌릴 어리석은 짓이다.

“승리할 때까지 계속 싸워야 한다!”

아서 타우넨드

출처 Arthur Townend, 'Is the real death toll in Gaza now 186,000?' (2024. 7. 10) / 번역 김준호

〈조선일보〉는 일부 노조의 이주노동자 배척 비난할 자격 없다

노동운동은 이주노동자 유입 무조건 환영해야

7월 5일 〈조선일보〉가 “외국인 없으면 조선소 안 돌아가는데 ... 노조는 ‘잔업 뺏는다’ 공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조선업 노동조합들이 이주노동자가 한국인 노동자의 일거리를 빼앗는다고 주장하는 것을 비난하는 내용이다.

〈조선일보〉가 이주노동자를 위하는 척하는 것은 역겨운 위선이다.

〈조선일보〉는 5월 17일 자 사설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을 주장하며 이렇게 말했다.

“특히 한국은행은 돌봄 서비스 ...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말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적극 검토해야 할 제안이다.”

2018년에는 “한국인 근로자가 거의 찾지 않는 주물 등 뿌리 산업 위주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하는 방안을 도입하자”며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하는 기사를 사흘에 걸쳐 연재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이주민 가족의 건강보험 적용을 축소하는 개악을 추진했을 때도 〈조선일보〉는 이를 적극 뒷받침했다.

예컨대 한국인 사위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한 50대 중국인이 한국에서 간 질환 치료를 받아 9000여만 원의 건보공단 부담금이 발생한 사례를 부각하며 “외국인 건보 먹튀,” “1억 원 빼먹었다”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비난했다.

이주민과 그 가족이 본국에서 진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고통받거나 죽어도 된다는 것인가?

결국 개악안은 국회를 통과해 올해 4월 시행됐다.

또 〈조선일보〉는 지난해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가 나자 “현장 인력 대부분 경험 미숙 외국인 ... 시공 오류·품질 저하, 예견된 사태”라며, 부실시공이 마치 미숙련 이주노동자 때문인 양 호도하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이번 기사에서 조선업 사용자들이 이주노동자가 “건강하게 금의환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한다고 소개한다. 이 또한 거짓말이다.

‘조선업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금속노조, 2023)를 보면, 응답자의

평균 시급은 9680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이었다. 월평균 3일 이하로 쉰다는 응답자가 30퍼센트를 넘었다.

응답자의 63퍼센트가 다른 곳으로 이직하고 싶다고 답했는데, 그중 약 67퍼센트가 “노동강도에 비해 임금이 낮아서”를 이유로 꼽았다. “작업장 환경이 너무 위험해서”라고 답한 응답자도 약 24퍼센트였다. 조선소에서 가장 힘든 점으로는 위험한 작업 환경이 첫째로(약 44퍼센트) 꼽혔다.

권준모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운영위원은 조선소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말한다.

“이주노동자들이 취업 알선비로 많

게는 2000만 원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이 돈을 벌충하면서 고국의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야 합니다. 한국 물가가 비싸다보니 회사 회식 외에 외식은 꿈도 못 꾸고 편의점만 이용하는 처지예요. 그래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이 적은 것에 불만이 있고 잔업, 특근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처럼 사용자들과 〈조선일보〉 등 우파 언론들은 이주노동자를 저임금과 열악한 조건으로 이용하는 데 관심이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와 사용자들의 위선에도 불구하고, 조선업 노동조합들이 이주노동자를 배척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는 매우 근시안적인 태도다.

근시안적 태도

〈조선일보〉는 현대미포조선노조와 금속노조 현대삼호중공업지회 등의 소식을 지를 인용했다.

현대미포조선노조는 소식지 〈함성소식〉 6월 25일 자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이주노동자들이 포화 상태인 지금 조합원들의 잔업과 특근의 자리를 값싼 이주노동자들에게 빼앗기고 있는 현실이 왔다.” “사측은 이주노동자 확대 멈추고 잔업통제에 대한 대책 마련하라!”

그러나 조선소 노동자들에 따르면, 최근 HD현대미포 조선소에서 잔업과 특근이 줄어든 것은 도크 가동률이 일시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중형 선박 여러 대를 건조하던 도크에서 대형

외국인 건보 먹튀... 장인까지 한국 모셔와 1억원 빼먹었다

한국 거주 외국인 피부양자 '건보 먹튀' 늘어 커뮤니티션 '한국 건강보험 활용법' 공유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이주민 차별 조장하는
〈조선일보〉 기사들

선박을 건조하느라 도크를 100퍼센트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일거리가 줄어든 것은 이주노동자 탓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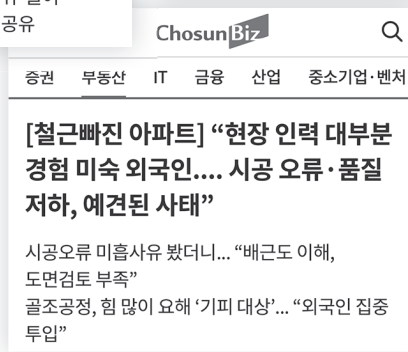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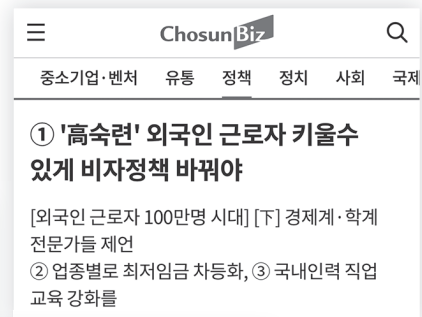
노동자들이 잔업과 특근을 하려는 진짜 목적은 임금을 더 많이 받으려는 것이다. 사실 잔업과 특근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임금이 보장돼야 한다.

그런데 노조 지도부는 모든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투쟁을 조직하기보다 이주노동자를 배척해 한국인 조합원의 잔업과 특근을 확보하겠다는 선택을 한 것이다. 설령 요구를 달성하더라도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

모든 노동자들이 고물가로 고통받는 지금 임금 인상 요구를 분명히 하며 투쟁하는 게 개별 사업장을 넘어서는 지지를 받는 데 더 효과적인 것이다. 윤석열 정부 초기 화물연대와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이 그런 효과를 낸 바 있다.

반면, 이주노동자 배척 같은 협소한 부문주의적 요구는 사용자와 친사용자 측 언론들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양 위선을 떨며 노조를 '이기적 기득권 집단'으로 매도하는 데 이용당하기 쉽다. 이번 〈조선일보〉 보도도 이주노동자 배척 요구의 약점을 이용해 노동자들의 불만에 대응하려고 사용자 측이 〈조선일보〉에 '제보'한 것일 수 있다.

현대삼호중공업지회는 소식지 〈노동자 함성〉 7월 4일 자에서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는 조선소 작업 현장의 위험을 높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작업 현장의 위험을 높이는 것은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 자체가 아니라, 사용자 측이 안전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기존 이주노동자의 안전 대책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할지라도 이주노동자 신규 유입에는 반대하게 될 것이다.

이번 소식지에서 이주노동자 확대를 반대한다고 명시한 것은 아니지만, 현대삼호중공업지회가 속한 조선업종노조연대는 그동안 이주노동자 확대 반대 입장을 내 왔다.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유입을 반대하는 노조에 신뢰를 보내기는 어렵다.

이미 조선업 노동자의 약 10퍼센트가 이주노동자로 추산되며, 앞으로 이 비율은 더 높아질 것이다.

또 이주노동자의 체류가 장기화하면서 “숙련이나 기술에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노동자가 되고 있다.”(“이주노동자가 만든 한국 배, 김현미 등, 2020) 이런 이주노동자들이 노조에 반감을 갖게 되면 사용자에 맞서 효과적으로 싸울 수 없다.

조선업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가사노동자, 건설플랜트업 등 이주노동자 유입 확대에 노조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조선일보〉는 이간질을 더욱 부추기고자 이번 기사를 냈을 것이다.

노동조합과 좌파들은 이주노동자 유입을 무조건 환영하고 함께 투쟁해야 한다.

임준형

우리의 기본 입장 해설 11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하는 이유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국제주의는 무엇인가? 국제주의는 그저 다른 나라 사람들과 느끼는 따뜻하고 막연한 유대감을 일컫는 말이 아니다. 국제주의는 자본주의에 맞서야 하는 이유다.

대기업들은 국경을 넘나들고 여러 대륙에 걸쳐 생산을 조직한다. 자본주의 세계 체제는 전 세계에서 착취를 하고 이윤을 뽑아낸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억압받는 민족의 자결권을 옹호한다. 그러나 노동계급의 숙적인 제국주의와 식민 지배에 맞선 투쟁의 일부로서 그렇게 한다.

각국 지배계급은 계급 적대성을 흐리기 위해 “국익”이라는 신화를 퍼뜨린다. 그렇게 해서 자국 노동자들을 동원하고, 같은 노동자들을 서로 싸우게 만든다.

그런데 개혁주의자들 또한 국익 논리를 수용하고 때로는 이를 앞장서서 퍼뜨리기도 한다.

좌파적 포퓰리즘 전략을 추구하는 일부 좌파는, ‘국민의 이익’을 진정으로 대변하지 않는 한 줌의 수구 보수세력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이 계급을 초월한 단결을 통해 민족의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의 이면은 노동자들이 사용자들이나 자본주의 국가 기구와 이해관계를 공유한다는 환상을 지속시키는 것이다.

‘누가 진정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가’를 물으며 국민적 단결을 강조한다면 계급투쟁의 결정적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사회주의자들이 고유의 계급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것을 달가워



한국인 노동자와 네팔 노동자가 함께 투쟁가를 부르고 있다

하지 않게 된다.

이 민족주의라는 “상식”은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하지만 훨씬 유용한 다른 종류의 “양식”도 있다. 공통된 착취와 차별의 경험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민족주의의 논리는 노동조합이 ‘국익’을 이유로 사용자들의 필요에 굴복하게 만든다. 그리고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기도 한다.

한국에서 민족주의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처지를 위해 이주 노동자 유입에 반대해야 한다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유럽 나라들에서 “영국의 가치”나 “프랑스의 가치”니 하는 것들은 국가가 무슬림·이민자·난민 같은 사람들을 악마화하고 배척하는 수단으로 쓰인다.

혁명가들은 민족주의와 정반대 입장을 취한다. 혁명가들은 국경 통제에 반대하고, 노동자들을 민족에 따라 나누는 데에 반대하고, 전 세계 노동계급 사람들이 단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전 세계 억압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는 동시에, 생계비 위기를 만회하는 것에 못 미치는 사용자와의 합의에 반대하고, 모든 노동자들의 쟁의에서 진정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싸운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전 세계 노동자들, 평범한 사람들과 연대하기 위해 노력한다.

독일 출신 혁명가 카를 마르크스는 각국 사회주의 정당들의 연합체인 제1인터내셔널의 규약을 작성하면서 이렇게 썼다. “노동계급의 해방은 한 지역이나 일국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문제이다.”

마르크스는 제1인터내셔널 창립 연설 뒷부분에서 노동계급은 “국제 정치의 수수께끼에 통달하여 자국 정부의 외교 활동을 감시하고 필요하면 최선을 다해 저지하거나, 저지할 수 없다면 일제히 규탄해야 할 임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연설을 끝맺었

다. “이와 같은 대외 정책에 맞선 투쟁은 각국 노동계급의 해방을 위한 전체 투쟁의 일부다. 만국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에게 전쟁 반대 운동, 이주 규제 철폐 운동, 이민자 권리 운동, 자국 기업주들에 맞선 투쟁은 하나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그런 투쟁에 개입하는 것은 한 나라 노동계급의 이해관계가 언제나 자국 기업주들이 아닌 다른 나라 노동계급과 일치함을 알기 때문이다.

평범한 사람들이 단결해 전 세계 지배계급에게 크게 한 방 먹일 가능성이 큰 기회들이 있다.

예컨대 서방 제국주의 열강의 범죄와 친서방 정부들의 공모를 백일하에 드러내고 있는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도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 서방 세계의 지도자들과 기업주들은 압제와 살해로 단결해 있다. 우리도 그에 맞서 단결해야 한다.

국제주의는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을 다음과 같이 끝맺은 1848년이나 오늘날이나 여전히 중요하다.

“프롤레타리아가 잃을 것은 사슬뿐이요, 얻을 것은 온 세계이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 글은 본지의 기본 입장을 해설하는 기획 연재의 열한 번째 글이다(QR코드로 전체 보기). 다음 연재에서는 천대받는 사람들이 국가 탄압에 맞서 힘으로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이 왜 정당한지 다룰 것이다.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좌파 주간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구독 문의: 02-777-2792, wspaper@ws.or.kr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ws.or.kr/online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노동자 연대” 검색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노동자 연대” 검색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칭: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연월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디엠코리아 현재호: 서울대08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전화: 02-777-2792 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paper@ws.or.kr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28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구독
♡ 좋아요
🔔 알림 설정

- ▶ 다양한 주제의 토론회 영상
- ▶ 주요 시사 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 610여 개 콘텐츠 체계적 분류
- ▶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를 저항, 역사, 전망
-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지금 구독하세요!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문의: 02-2271-2395 ws.or.kr/join

ws.or.kr/what-we-stand-for

기본입장

‘36주 낙태 영상’ 논란

임신중지는 “살인”이 아니다. 여성 자신의 권리여야 한다

정부의 처벌 시도 규탄한다

지난 6월 말 자신을 20대로 소개한 여성이 유튜브 채널에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제목: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을 올렸다. 아직 해당 영상의 진위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재빠르게 그 여성과 임신중절 수술을 한 의사에 대해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경찰청장은 “무게 있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정부는 ‘낙태죄’ 폐지 이후 임신중지권을 보장하라는 여성들의 요구를 한결같이 무시해 왔다. 그레 놓고 임신중지에 대해 “살인” 운운하며 떠들썩하게 도덕적 공포를 조장해 처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운동의 성과로 ‘낙태죄’는 2019년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대체입법이 마련돼야 했지만,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 책임을 방기하며 임신중절약(미프진) 도입과 임신중지 합법화 등 여성의 요구를 외면해 왔다.

그래서 ‘낙태죄’ 효력 정지 이후에도 여전히 여성들은 법적·제도적 공백 속에서 임신중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노동자·청년·서민층 여성들은 비싼 병원비와 사회적 낙인으로 고통 받고 있다.

정부는 이런 고통을 해결하기는커녕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의 칼을 빼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를 지원하고, 인종학살 국가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늘려 온 윤석열 정부가 “생명 보호” 운운하



나의 몸, 나의 선택 2018년 비웨이브의 임신중지 전면 합법화 시위

며 임신중지를 비난하는 것은 역겨운 위선이다. 이스라엘의 잔혹한 공격으로 가자지구에서 1만 4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살해됐지만, 정부는 이스라엘을 살인자라고 비난한 적이 없다.

후기 임신중지를 고리 삼은 공격에 반대해야

정부는 “36주 태아는 독립적 생존이 가능하다”며 살인죄 수사 의뢰를 합리화한다.

그러나 임신 후기라 할지라도 태아는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니고 모체에 모든 것을 의존해야만 하는 모체의 일부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태아의 권리”나 “임신중지가 살인”이라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몸 안에서 벌어

지는 일이고 여성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임신중지권은 여성이 자기 삶을 결정하는 데서 중요한 권리여야 한다. 임신을 유지할지 말지는 오롯이 여성 자신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임신 기간과 관계없이 적용돼야 한다. 기간 제한은 결국 그 조건의 충족 여부를 국가나 의사 같은 제3자가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여성에게 임신중지권을 주는 것이 아니다.

후기 임신중지는 시점을 놓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갑자기 불가피한 사유가 생겨 뒤늦게 후기 임신중지를 결심할 수도 있다. 여성이 후기 임신중지가 여러모로 부담이 클 수 있음을 알면서도 선택하는 것은 그만큼 절박한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처벌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한 방식으로 임신을 중지할 위험을 키워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뿐이다. 따라서 후기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을 반대해야 한다.

임신중지를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기 때문에 항상 보수주의자들은 임신중지권 전반을 공격하기 위한 발판으로 먼저 후기 임신중지를 문제 삼았다. 임신 후기 태아는 인간에 가깝다고 주장함으로써 도덕적 우위를 점하기 쉽다고 봤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와 우파들도 지금처럼 극소수의 후기 임신중지를 시범 케이스 삼아 공격함으로써, 임신중지에 대한 제약과 처벌을 담은 법안 추진을 정당화하려 할 수 있다.

이미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국회에서 각각 임신 6주, 임신 10주 이내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임신중지를 허용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 5년 동안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이었던, 임신중지권을 보장하는 법을 제정하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우파들은 ‘낙태 반대’를 자신의 정치적 어젠다로 삼으며 임신중지권을 공격해 왔고, 이에 맞선 저항이 있어 왔다. 지난 2022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했을 때 전 세계 우파는 크게 고무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이번 공격도 국내에서 우파를 고무하는 효과를 일부 낼 수 있다.

후기 임신중지를 고리로 한 “태아 생명권” 논리에 흔들리지 말고 윤석열 정부와 우파의 임신중지 공격에 맞서야 한다.

전주현

▶ 16면에서 이어짐

다. 그 효과는 반정부 투쟁이 반제국주의 투쟁과 결합되는 만만찮은 저항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처음부터 약화된 것이었다.

민주노총·진보당·정의당 등 개혁주의 지도부들은 개혁 입법 선물을 해야 변화 염원 대중이 자신들을(선거 등에서) 지지할 것으로 여긴다.

개혁주의 지도부들은 흔히 지금 같은 심각한 위기의 시대에 대중 전체에 개혁 성과가 적용되려면 경제 투쟁이 아니라

정치적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정치 투쟁은 노동계급 일반의 투쟁을 고무하는 것이 아니라 선출된 직업 정치인들이 의회에서 책략과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런 (진보 포퓰리즘) 노선에서는 개혁 입법이 대중 투쟁의 결과물이 아니라 민주당과의 입법 공조의 결과물이 된다.

그렇수록 대중에게 민주당과 노동조합, 좌파 정당들의 공조를 지지하라는 비자주성과 수동성이 조장된다. 그리고 좌파는 특정한 입법 쟁점에서 불가

피한 전술적 공조 수준을 넘어서 민주당과의 전략적 계급 협력을 해야 한다는 압력에 노출되게 된다.

좌파 주류의 전통인 민주대연합 노선은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 이처럼 의회주의와 계급 협력주의는 서로를 강화시켜 왔다.

지금은 아직 대중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정치 위기의 심화는 상황이 급변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김문성

ws.or.kr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분쟁의 바다’ 남중국해에서
고조되는 미중 갈등

★ 윤석열의 의대 증원
팬데믹 이후 새로운 이윤 축적
기회를 잡기 위한 시도

★ 전시회 <우리가 인디언으로 알던
사람들> 리뷰



윤석열의 위기와 반윤석열 투쟁 기층의 광범한 대중 투쟁이 관건이다

여권의 내분이 심각해지고 있다.

당대표 경선에서 원희룡은 한동훈을 상대로 사실상 윤석열·김건희의 대리전을 치르고 있다. 한동훈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시사하기 때문이다. 원희룡은 자신처럼 노회한 기회주의자인 나경원과 반한동훈 연합에 합의했다.

그러나 경선 판세는 한동훈에게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실제로 한동훈이 이기면 윤석열의 정치적 위기는 한층 더 깊어질 것이다.

국내에서 궁지에 몰린 윤석열은 지난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나토와의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행보를 보였다. 동행한 김건희는 북한 인권을 소재로 외교 활동을 벌이고 왔다.

안보 불안을 빌미로 국내의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을 공격해 위기를 돌파할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여권 바깥에서도 윤석열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다.

7월 13일 야 6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새로운미래)과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군인권센터 등이 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규탄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무더위 땀별 아래 1만여 명이 모여 기세 좋게 도심 행진도 벌였다.

야당 대표자들은 채 해병 특검법의 재표결, 윤석열 특검, 한동훈 특검, 국정조사 등으로 맞서자고 호소했다.

같은 날 시청역-승례문 대로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는 기세가 더 좋았다. 수천 명이 참가한 이 집회는 윤석열 탄핵으로 곧바로 나아가자고 주장했다.

또다른 특검은 시간 낭비

윤석열 퇴진 집회를 매주 주최해 온 촛불행동이 발의한 국회 윤석열 탄핵 국민동의청원은 140만 명을 돌파했다. 촛불행동은 7월 20일 대규모 전국 집중 집회를 호소하고 있다.

윤석열의 정치적 위기가 다시 고조되는 시점에서 열린 두 집회는 반정부 정서가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그런데 야 6당이 새로운 특검법, 국정조사 등 거의 의회 절차들만을 대정부 투쟁의 수단으로 제시하는 것은 매



김민호 기자

의회적 수단으로 운동의 성장 가능성을 처음부터 제한하지 말고, 정권 자체를 정조준하고 노동계급 대중의 동원을 늘려야 한다

우 소심하다.

물론 현재 의석 구도에서 특검이 재의결되려면 적어도 10명 안팎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여당의 내분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왔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지려면 장외 대정부 투쟁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져야 한다. 의회 내 투쟁으로 수단을 한정하면 그렇게 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셈이 될 것이다.

특검이 통과되면 윤석열을 직접 겨냥하는 투쟁은 지연되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특검 수사를 개시하는 데만도 거쳐야 할 절차가 많다. 특별검사 추천, 추천자 중 대통령의 임명, 임명된 특별검사가 팀을 꾸리고 수사를 준비하는 기간 등 최소 한 달이 더 걸린다.

이 기간에는 특검 관련해 시간을 주고 지켜보자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다.

그렇다고 특검의 수사가 진실을 속속들이 다 밝혀내서 윤석열의 결정적인 위법 사항을 찾아낸다는 보장도 없다.

재판에서 유죄 받아 내기는 또 다른 난관이다. 심지어 헌법상 기소 면책 특권 때문에 윤석열은 기소조차 할 수 없다. 그러니 특검을 통해 탄핵으로 가는 것은 거의 공상에 가깝다.

게다가 한동훈 특검 등 새 특검을 발

의하면 법안 통과 절차를 또 거쳐야 한다. 국회 국정조사는 수사권이 없어서 실효성도 없다.

이미 윤석열·김건희의 책임이 드러나고 정권 지지도가 거의 최악에 이른 상황에서 왜 초점이 대통령실이 아니라 국회로 향해야 하는가?

정권이 채 해병 진상 규명을 필사적으로 가로막는 마당에 대중에게 정권 퇴진을 걸고 싸우자고 호소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진보 포퓰리즘의 한계

세월호 참사 항의 투쟁이 세월호를 인양해 참사 원인을 비교적 좀 더 규명하고, 정권 측 책임자들을 조금이라도 처벌하게 된 것은 세월호 특별법이 아니라 박근혜 퇴진 투쟁 덕분이었다. 이조차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와 의존으로 대중 투쟁이 소강상태가 되면서 그 성과가 훼손됐지만 말이다.

따라서 필요한 일은 의회적 수단으로 운동의 수단을 제한해 운동의 성장 가능성을 처음부터 제한하지 말고, 정권 자체를 정조준한 대중 투쟁을 건설하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계급 대중의 동원을 늘려 운동을 급진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좌파 정당들은 그들대로 그런 방향으로 운동을 키우지 않고 있다. 사회계급 문제

인 채 해병 문제를 특검법 쟁취로 한정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른바 노란봉투법 투쟁도 노동자들이 독립적으로 대규모 거리 집회를 열고 연대 파업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혁입법 우위에 따라 민주당을 통해서 법 개정을 하는 것으로 흘렀다. 최근 노동법 2·3조 개정안을 두고도 민주당의 삭감 압력이 통했다.

전세 사기 대란 때도 수많은 노동계급 청년과 서민 피해자들을 결집시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중 항의를 조직하기보다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만드는 것으로 해결하려 하다가 오히려 피해 당사자들에게 비난받는 수준의 입법을 하고 말았다.

민주당은 일부 개혁 입법에 의욕을 보이지만, 국민의힘과 기업인들의 합의를 얻어 내려면 애초의 요구를 삭감해야 한다고 개혁주의 정당들을 압박한다.

민주당은 이렇게 해서 개혁 염원 대중의 표도 얻으면서, (국민의힘과 달리 자신들은) 대중 저항을 달래서 기업인들을 위한 정치 안정을 도모할 역량이 있음을 입증하려 한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한미일 군사 공조 강화와 일본 핵폐수 방류 묵인 등에 대한 반대 운동에서 앞장서 거리 집회를 주도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집회들을 금세 흐지부지하게 이끌었

▶ 15면으로 이어짐